

[성명서] 불법, 부당선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kt노조 선거가 불법,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싹쓸이 추천으로 후보 등록을 못한 조합원이 낸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져 11월 30일로 예정되었던 투표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되었다. 결정문에서는 추천과정에서 노사합작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타 조합원의 등록을 방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와 입후보등록공고를 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가처분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민주후보 측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11월 29일 중앙본부를 항의방문하여 김구현집행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t노조는 11월 30일 오전 8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약을 뛰어 넘는 규정개정안을 10분만에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재 공고를 하였다. 개정안으로 삽입된 내용은 '법원무효 판결 시 노조가 모든 사항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선거운동 기간, 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집행부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kt노조 제 11대 대표자 선거는 초반부터 노조의 불법행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쳤다. "1번을 제외한 후보자들에게 추천해 주지 말라"는 지시가 난무하고 민주후보 측 대구, 강원, 충북, 제주에서 후보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후보 측 유세 시 조합원 빼돌리기 등 운동 방해 행위도 도처에서 일어났다. 선거가 종반으로 가면서 투,개표소 문제는 어용노조의 장기집권의 음모를 드러내는 최대의 사건으로 떠 올랐다.

투,개표소 698개! 5명~20명 사이 조합원이 투표하는 곳이 227개이며 팀장이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투,개표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는 투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명확히 공개투표에 해당된다. 3천7백만 투표인에 1만 3천여 개의 투표소에 240여 개의 개표소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 2만 5천명 조합원에 698개나 되는 단위노조 사업장의 투,개표소는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선거가 계속되면서 불법, 부당행위는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우리는 금번 가처분 결정이 노조와 회사의 반성으로 공정한 선거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 등록에 들어간 지부장 선거에서도 회사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분노를 표하면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만일 노사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사퇴하라!

하나, 분리 투,개표소 폐기하고 통합 투,개표 설치하라!!

하나, 김구현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하라!

하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